

민주적 소통과 시민의 성장 : 소통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나상원 고려대학교

논문요약

이 논문은 민주주의와 시민의 성장 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특히 이 논문은 아이리스 영(Iris Young)의 소통적 민주주의(communicative democracy)에 주목한다. 영에 의하면, 소통적 민주주의란 공적 의사결정과 소통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시각이 배제되지 않는 민주주의다. 이 논문은 소통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민주적 소통이 사회적으로 배제된 시민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밝혀보고자 하며, 사례로서 세월호 운동을 통해 민주적 소통방식이 세월호 운동 참여자들의 성장을 어떻게 견인했는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선거민주주의 혹은 제도권 중심의 엘리트 민주주의를 넘어, 민주적 주체와 그 소통방식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정의롭고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이론정립에 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결국, 기존의 민주주의는 주기적인 선거 중심으로 정치적 소통과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이해하는데 그쳤지만, 이 논문은 선거 중심의 협소한 이해에서 벗어나 민주적 소통과 시민적 성장의 의미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 소통적 민주주의, 시민의 성장, 민주적 소통, 아이리스 영, 세월호 운동

I. 서론

기존의 많은 민주주의 논의들은 민주주의가 시민사회의 성숙에 기여하고 있는 지점들을 언급한다(Fishkin 2009; 홍성구 2019; 정병순 2020). 그도 그럴 것이 풀뿌리 운동으로서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시민사회 간 양(positive)의 상관성을 예단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메커니즘으로 민주주의가 시민사회의 성숙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논문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보다 구체적으로 민주주의와 시민의 성장 간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 논문은 아이리스 영(Iris Young)의 소통적 민주주의(communicative democracy)에 주목한다(Young 1990; 1996; 2000; 2001). 영에 의하면, 소통적 민주주의란 공적 의사결정과 소통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시각이 배제되지 않는 민주주의다. 소통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민주적 소통이 사회적으로 배제된 시민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밝혀보고자 하며, 사례로서 세월호 운동을 통해 민주적 소통방식이 세월호 운동 참여자들의 성장을 어떻게 견인했는지 살펴보고자 하겠다.¹⁾

민주적 소통과 시민의 성장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본 논문은 기존 민주주의 연구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첫째, 최근의 많은 민주주의 연구는 ‘심의’와 ‘숙의’에 관심을 보인다. 절차적 민주주의나 선거

1) 아이리스 영의 민주주의를 다루는 대표적인 국내연구로는 김희강(2010)과 현남숙(2020)을 들 수 있다. 이 두 연구는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 집단이 배제된 기존 민주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 영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점친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의 문제의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들 연구에 비해 본 논문은 영이 언급한 다양한 소통방식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개별 시민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본다. 특히 영의 논의를 세월호 운동이라는 사례에 적용시켜봄으로써 영의 민주주의의 실천적 함의를 강조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많은 연구들은 ‘심의,’ ‘토의,’ ‘숙의,’ ‘참여’ 등의 표제어에 주목했다(Thompson 2008; Lafont 2017; 오현철 2010; 심성은 2015; 최경희·하세헌 2015; 이관후 2018; 채진원 2019). 하지만 무엇이 심의이고 숙의인지, 또한 어떤 모습의 토의이며 심의인지인지에 대해 주목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반면 본 논문은 소위 ‘심의민주주의’에서 언급하는 ‘심의’의 구체적인 모습, 즉 시민들 간의 구체적인 소통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심의’ 및 ‘소통’을 강조하는 기존 민주주의 연구들도 소통의 주체가 되는 시민의 구체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까지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소통의 주체로 시민 혹은 대중을 언급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시민이고 어떤 대중인지, 더 나아가 소통이 더 필요한 시민과 대중은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언급하는 시민은 시민의회나 공론화위원회에 참가하는 시민대표로 설정된다(조희정 2018; 김주형 2018). 이에 비해 본 논문은 소위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시민에 주목하여, 이들이 전개하는 혹은 전개하고자 하는 민주적 소통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소통에 관심을 보이는 민주주의 기존 연구들도 소통을 의사결정을 위한 수단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시민 간 소통의 목적이란 궁극적으로 공동선의 설립이나 합의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장동진 2012; 정정화 2018). 이는 제한된 시각으로 소통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며, 반면 본 논문은 민주적 소통의 보다 거시적이며 포괄적인 역할, 즉 시민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함의는 선거민주주의 혹은 제도권 중심의 엘리트 민주주의를 넘어, 민주적 주체와 그 소통방식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정의롭고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이론정립에 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이다. 기존의 민주주의는 주기적인 선거 중심으로 정치적 소통과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이해하는데 그쳤지만, 본 논문은 선거 중심의 협소한 이해에서 벗어나 민주적 소통과 시민적 성장의 의미를 확장할 수 있게 하고자 함이다.

본 논문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II장에서는 영의 소통적 민주주의를 짧게 소개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영의 소통적 민주주의에서 언급하는 민주적 소통의 특징을 세 가지로 짚고, 그러한 특징이 총체적으로 시민의 성장과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IV장에서는 세월호 운동의 사례를 통해 민주적 소통이 시민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겠다. V장에서는 본 논문의 함의를 강조하며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II. 영의 소통적 민주주의

영은 주로 정의(justice)를 연구하는 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녀의 대표적인 저서 『차이의 정치와 정의(Justice and Politics of Difference)』에서 기존의 자유주의 정의, 특히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를 비판하고 ‘차이의 정치(politics of difference)’로 명칭되는 사회적 약자의 정치를 주장한다(Young 1990). 영은 자유주의 정의론자들과 달리 부정의(injustice)를 교정하는 정의론을 주장한다. 즉, 영의 정의론은 롤즈(John Rawls) 같이 가상적 전제에서 출발한 이상(ideal) 사회에 대한 디자인을 제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추상적이고 유토피안 설계는 실제 사회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부정의의 참상을 지적하지도 교정하지도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영의 입장에서 볼 때 정의론에서 필요한 것은, 다시 말해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우선 먼저 부정의가 드러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가 드러나야 그것을 교정하고 더 바른 사회,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의를 겪고 있는 이른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이들의 목소리가 드러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방식들이 공론장에서 인정되어 들리고 회자되어야 하며, 이들의 목소리와 다양한 표현방식들이 경합되는 의사결정 과정에 녹아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치적 소통의 과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더 정의로운 해법은 요원해진다고 영은 강조한다(Young 1996,

685; 2000, 172; 2001, 671).

따라서 본 논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지점은 정의론자인 영이 어떤 맥락에서 민주주의 논의를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다. 영은 무엇을 정의로 볼 것인가라는 정의의 내용보다 산출된 내용이 정의로울 수 있는 조건에 관심을 기울인다. 즉, 정의로움(justice)이 나올 수 있는 과정과 조건으로서 민주주의를 거론한다(Young 2000, 47-49, 56). 따라서 영에게 민주주의란 정의를 지향하고 정의에 가까워 질 수 있는 민주적 조건으로 언급되는 것이다. 영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영향 받는 사람들이 (이들이 부정의를 감내하는 사회적 약자들이더라도) 발언권과 표결권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제도이며, 이러한 보장을 통해서만이 민주주의가 부정의를 대적하고 정의를 증진할 수 있는 최선의 정치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Young 2000, 50-54, 72). 결국, 영은 민주주의를 목적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그 자체로 정의로운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의사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이자 정치적 수단으로 이해한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영의 정의 개념은 우리가 지켜야 할 미리 정해진 신조(principle)나 목록(list)이라기보다 민주적인 조건하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시각과 목소리가 배합되어 그 모습이 드러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은 소통적 민주주의(communicative democracy)를 주장한다(Young 2000, 41-47).²⁾ 소통적 민주주의란 의사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공적 의사가 결정되는 과정 및 공론장에 등장하지 못한 시각이 포용되고 소통되는 민주주의이다. 우선 영은 의사결정과정 혹은 공론화 과정에서 억눌리거나 배제되고 주변화된 이들의 경험과 시각이 온전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그러한 경험과 시각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회자되고 설득되며 다른 구성원들의 경험과 시각과 경합하고 배합되어야만 결과적으로 정의로운 정치적 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2) 보다 정확한 영의 표현에 따르자면 '포용적으로(inclusively) 소통적 민주주의'이다.

즉, 영은 사회적 약자의 시각과 관점이 의사결정이라는 사회적 과정에서 원활하게 부각되고 소통되는 것이 소통적 민주주의이며, 바로 소통적 민주주의라야 정의를 담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Young 2000, 87-100).

따라서 영에게 소통적 민주주의란 정의를 향한 조건인 것이다. 영은 기존 민주주의와의 비교를 통해서 소통적 민주주의의 특징을 설명한다(Young 2000, 30-41). 영의 소통적 민주주의와 비교대상이 되는 민주주의는 선거(선호집합)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이다. 영에 따르면, 선거 민주주의 혹은 일반적으로 다수제로 알려진 선호집합(aggregate)민주주의는 구성원 개개인의 선호를 단순 합산하는 기제이다(Young 2000, 31). 이 민주주의는 다수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에 집중할 뿐이다. 무엇보다도, 옳고 그름 그리고 정당함과 부당함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을 다수득표로 환원하기 때문에, 소수에 대한 다수의 지배가 규범적으로 (혹은 가치평가적으로) 인정되는 위험이 있다. 실제로, 선거에 나온 입후보자들은 몇 안 되는 쟁점에 승인도 부인도 안하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으면서도, 선거에 뽑힌 이후에는 그러한 모호함이 다수제라는 제도를 통해 규범적 정당성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입후보된 이들 중 한 명(혹은 두 명)을 뽑아주고 난 후 다음 선거까지 정책이나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물러나 보고만 있어야 하는 방관자로 돌아갈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은 선거민주주의를 통해서는 약자들의 시각이 공적으로 표출되고 이것이 공적 토론장에서 소통되어, 부정의를 지적하고 정의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규범적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았다(Young 1996, 121, 133; 2000, 54).

반면 영은 심의민주주의는 선거민주주의와 달리 정치적 평등이 실현되는 규범적 이상에 보다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심의’로 이해되는 공적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이 정치적 평등이 실현되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Young 2000, 41). 하지만 심의민주주의도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한계가 포착된다고 영은 지적한다. 첫째, 심의 민주주의는 공동선(common good) 혹은 공동선을 가능하게 하는 질적

으로 동일한 공중(homeogenous public)을 전제하기 때문에, 억압이나 지배 같은 부정의를 겪고 있는 구성원들 간의 차이와 경험, 시각 등이 사장될 여지가 크다고 보았다. 둘째, 심의민주주의에서 전제하는 ‘심의’는 이성 중심의 사고와 면대면의 상호작용을 전제하기 때문에, 공적 논쟁의 경합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초연하게 논증하는 방식만을 공적 소통방식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심의민주주의는 특히 억압받는 약자의 감정과 경험 그리고 시각을 사장시킬 위험이 크다고 영은 지적한다(Young 1996, 133; 2000, 35).

이에 비해 소통적 민주주의는 선거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의에 기여하는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영은 주장한다. 왜냐하면 소통적 민주주의는 사회정의를 더 증진할 수 있는 확장된 정치적 소통방식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Young 2000, 182-187). 소통적 민주주의에서 개념화하는 정치적 소통방식은 심의민주주의에서의 소통방식, 즉 이성 및 문어체적 전달방식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영에 따르면 심의민주주의의 소통방식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제와 주변화를 낳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반면 소통적 민주주의에서 전제하는 소통방식은 부정의를 겪고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처지를 공적으로 드러내고 다른 구성원을 설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소통방식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시위나 감정적 몸짓 같은 비언어적인 소통방식도 약자의 정치적 소통방식으로 인정된다. 비언어적 소통방식이 비록 점잖고 차분한 말투, 이성적인 언어, 절제된 몸짓이나 어법 등으로 정제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러한 방식은 부정의를 드러낼 수 있는 민주적 소통수단일 수 있다고 영은 강조한다. 즉, 그것이 비언어적이라 해서 정의를 지향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영의 민주적 소통방식은 단지 국회나 법원 같은 제도권만을 소통의 공간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광장과 거리 역시 구성원이 각자의 삶의 경험을 드러내고 표출할 수 있는 민주적 소통과 상호작용의 공간으로 간주된다. 영에 따르면, 비록 일각에서는 이러한 소통방식을 사회분열을 선동하는 것으로 백안시될 여지가 있겠지만, 소통적 민주주의에서는 이러한 소통방식이

사회부정의를 직시할 수 있게 해주며 그 만큼 정의에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정치적 자원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한다(Young 2000, 188-190; 2001, 671).

정리하건대, 소통적 민주주의에서는 부정의를 드러내고 바로잡기 위해 감정적이지 않은 논증적 어법중심의 소통방식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방식으로 이뤄진 소통을 인정한다. 소통적 민주주의는 논리, 이성, 질서 중심의, 즉 소위 중산층 남성 중심의 방식만을 공적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국한시키지 않으며, 그 결과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험과 시각까지 민주적 과정에서 부각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넓은 방식의 민주적 소통을 지지한다. 영에 따르면, 바로 이 같이 더 많은 주체들이 더 많은 민주적 소통을 통해 사회를 호전시킴으로써 정의가 보다 진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III. 민주적 소통과 시민의 성장

이 장에서는 앞장에서 살펴본 소통적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사회정의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영이 소통적 민주주의에서 강조한 민주적 소통의 방식이 시민의 성장에 어떤 점에서 기여하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민주적 소통의 특징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러한 특징을 통해 시민의 성장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밝혀보도록 하겠다.

1. 민주적 소통의 특징

부정의를 바로잡고 정의를 진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의 시각과 경험이 소통과정에서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소통적 민주주의라 할 때, 민주적 소통의 특징은 무엇인가? 정의로운 의사결정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정치적 소통수단의 특징은 무엇인가? 영은 전통적인 ‘심의’를 비

판하고, 정의의 진작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소통방식으로 (1)비언어적 소통방식, (2)비제도화된 공간, (3)경합적 소통방식을 민주적 소통의 특징으로 거론한다.

1) 비언어적 소통수단도 민주적 소통의 수단이다.

영은 감정적이지 않음(dispassionate), 몸짓이 없는(disembodied) 태도, 문어적(literal) 스타일의 어법만을 이성적인 것으로 전제하는 기존 심의민주주의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감정적임과 몸짓 같은 비언어적 소통수단을 민주적 소통수단으로 강조하여 인정한다(Young 1996, 124; 2000, 55-58). 영에 따르면 기존의 ‘심의’는 이성중심의 공적 대화에서 감정을 내색하지 않는 침착함과 차분함 같은 표현방식을 객관성을 잃지 않는 공적인 방식으로서 간주한다고 보았다. 기존 입장에서 볼 때, 억울함, 분노, 슬픔, 두려움 등이 표출되는 감정의 표현방식은 그것의 맥락과 근거 및 요구내용과 주장과 무관하게 객관성을 오염시켜 공적 소통방식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성 중심 민주주의자에게 큰 제스처나 신경질적인 몸동작 또는 몸으로 표출되는 감정실린 항변과 절규는 객관성이 없는 것으로 사절되며, 절규하는 화자(話者) 역시 이성과 절제력을 잃은 공적 역량이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절하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존 ‘심의’는 감정의 억제라는 맥락에서 논리주장(argument) 같은 이성적인 표현방식만을 정치문화의 기준(이는 남성중산층으로 상징되는 젠틀맨 문화의 기준이기도 하다)으로 상정하여, 그 결과 여타의 감정적이고 비언어적인 표현방식, 특히 이러한 표현방식을 사용하는 여성, 장애인 혹은 양육을 하는 엄마 같은 사회적 약자의 말하기와 소통수단을 이성적이지 않고 절제력이 없는 것으로 예단하여 배제하였다고 영은 비판한다(Young 1996, 122).

영의 소통적 민주주의에서 감정적이고 비문어적 양상은 중요한 공적 소통수단이다(Young 1996, 130; 2000, 167; 2001, 670). 영에 따르면, 공적 소통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 및 태도나 논증으로 국한되지 않으며, 더 넓은 저변의 공중이 자신이 속한 사회나 다른 구성원들

에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영향 미칠 수 있는 경험담, 즉 내러티브(narrative)뿐만 아니라 영화, 연극, 노래, 스토리 같은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는 예술과 문화적 표현방식도 포함된다. 공적 소통이라도 어떤 원칙에 의해 일관되게 규율되거나 질서정연하지 않을 수 있으며, 놀이 같은 재치와 흥겨움으로 채워질 수 있고 감정적이며 다층적일 수 있다. 심지어 공적 소통이 부정의를 드러내고 사회정의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는 집회, 시위, 파업, 보이콧, 비폭력적 점거 등 다양한 양상의 항의적이고 규탄적인 몸짓과 행위들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Young 2000, 168; 2001, 671). 소통적 민주주의에서 대중의 시위는 반대와 비판을 표명하고, 힘 있는 행위자들에게 소명해야하는 책임(accountability)을 묻는 가장 중요하며 유효한 방식이며, 이러한 정치적 표출이 없다면 민주주의가 그 역동성을 잃을 것으로 보았다(Young 2000, 69).

결과적으로 영은 사회적 약자들의 감정적인 소통방식이라든가, 이는 경험의 차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민주적 소통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정의를 진작시킨다고 강조한다(Young 1996, 127; 2000, 53). 예컨대, 경험담이나 체험담 같이 문어적 표현양상이 아닌 내러티브라 해도, 이는 경험과 신념의 차이가 너무 커서 논리중심의 토론에 가담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의 체험적 전제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대화적이고 소통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소통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상대방의 체험담과 내러티브를 통해 나와 차이나는 사회적 위치에 처한 사람들이 같이 사는 이 세상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슨 일을 당했으며,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생각을 넓힐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Young 1996, 127; 2000, 53).

2) 광장은 공적소통의 무대이다.

이성적 논증 중심의 심의민주주의는 심의와 소통을 제도권 중심으로 한정한다고 영은 비판한다(Young 2020, 167). 영에 따르면, 기존 심의

민주주의는 심의를 의회, 법원, 청문회장 같은 제도권 영역 내의 활동으로 한정하거나 이를 제도권의 공직자들 간의 주요한 소통수단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결국,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입법부, 행정부 혹은 사법부 같은 국가제도는 심의의 주요 장소이자 무대로 간주되며, 그 결과 정치적 소통의 장에서 시민사회의 영역이 배제되고 주변화된다고 영은 지적한다(Young 2001, 678).

반면 소통적 민주주의는 광장을 주요한 공적 소통의 장으로 여긴다. 거리 역시 주요한 공적 무대이다. 영에게 공적 무대란 개방성과 드러남의 공간으로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자,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보고 서로에게 보여지며 서로에게 노출되는 현존함(present)의 공간이다(Young 2000, 342; 2001, 674). 그래서 영은 공적 무대를 질서 잡힌 국가제도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낯설고 때로는 생경한 이질적인 차이, 생소함, 불편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사회를 지금과 다른 시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공간으로 이해한다(Young 2000, 342; 2001, 683). 따라서 공적 무대는 단일(單一)정보다는 복수(複數)성을 전제하고 동질적인 것보다 이질적임을 당연하게 여기며, 다른 시각에서 비롯된 이견과 거리와 광장에서 분출되는 사회적 갈등을 다소 소란스럽고 불편하더라도 사회적 걸림돌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사회적 디딤돌로 여긴다. 그래서 광장은 구성원 각자가 처한 시점과 시각이 지닌 필연적인 맹점과 사회적 지식의 한계를 비춰주는 다수의 사회적 거울로 이뤄진 공간이 된다(Young 2000, 77).

따라서 소통적 민주주의에서는 사회적 문제와 쟁점을 포함한 실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곳이라면 제도권이 아니더라도 공적 소통의 무대가 된다. 예컨대, 시가지, 광장, 프라자, 공원 같은 공간에서도 우리는 행인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처지에 사는 낯선 사람들을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다. 소통적 민주주의에서 공적 무대는 상이한 위치에 있는 더 많은 공중의 비판에 열려있는 방식으로 시민과 시민, 시민과 공직자가 민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잠재적 무대이다(Young 2000, 67). 이는 공적 과정을 일원화된 국가기관 중심의 정

치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과 같이 일원화되지 않은 주체와 탈중양화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며, 면대면의 상호작용 방식이 아니어도 시간과 공간적으로 분산된 사람들에게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다(Young 2000, 45).

3) 소통적 민주주의는 진리를 향한 경험적 대담함이다.

소통적 민주주의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문제에 관해서는 공중에게 가르쳐 줄 무언가를 갖고 있다고 상정한다(Young 2000, 77). 또한 동시에 모든 구성원은 모든 사회문제에 통달하지 않으며 특정 편향성, 선입견, 맹점 혹은 고정관념을 갖고 정치적 갈등과 소통의 장으로 들어온다고 상정한다. 정치적 의견일치가 요원한 상황에서, 한쪽 입장의 집단적 이해나 고정관념은 그 입장에서는 당연하고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되지만, 다른 입장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선이해가 공유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식이 통계적 일반화로 대략적으로만 전달되는 대중사회에서 일반 구성원들은 모든 사회집단들이 요구하거나 주장하는 어떤 필요나 이익을 사실상 모르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정치적 소통의 규범적 의미는 개개인이 처한 다른 사회적 처지에 주목하고 특정한 경험과 의미를 깨치고 배워감으로써 자신들의 사회적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데 있다. 각자의 자리에서 비롯된 시각 차이가 서로의 배움과 변혁의 정치적 자원이자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적 민주주의는 각자의 위치에서 보는 부분적이고 편협한 시각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교학상장(敎學相長)으로 탐구하는 대담함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과의 갈등은 각자의 무지를 깨쳐줄 진귀한 텍스트가 된다. 결국 소통적 민주주의의 심의와 소통의 규범성은 듣고 말하기를 통해 서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Young 2000, 119).

영에 따르면 이러한 정치적 소통의 교학(敎學)의 대담함은 질서정연하거나 차분하지 않으며 쟁투적이고 경험적이다(Young 2000, 71). 영의 소통적 민주주의는 공적 논쟁을 점잖고 질서있으며 감정적이지 않

은 소위 젠트맨의 문법으로 규정하는 견해에 도전한다. 사회적 약자는 젠트맨의 어법과 규범이 선점된 담론지형 속에서 자신이 감당하는 부정의를 표출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법과 소통방식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 억압과 부정의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배제당하고 침묵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공적인 표현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사회적 약자의 소통방식은 충분히 경합적이고 쟁투적일 수 있다(Young 2000, 71; 2001, 685). 영은 기존의 심의민주주의가 정치적 표현을 지나치게 합리주의적 규범으로 좁혀서 이해하고, 그 결과 쟁투성과 경합성을 민주적 과정의 고질병쯤으로 등한시하여 사회적 다원주의를 정치적 단일성으로 해결하려 해왔다고 비판한다(Young 1996, 122; 2000, 72).

영의 소통적 민주주의는 소통의 과정을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승패를 끝장내려는 적대적인 결투가 아니라 시민들 간의 결연(engagement)의 과정으로 이해한다(Young 2000, 122). 쟁투적 과정은 서로의 아젠다를 경합적으로 갑론을박하는 치열한 과정이다. 그러나 치열한 경합의 사회적 지형은 평평하지 않으며 불리하게 배제된 사회적 약자들은 제도적 과정이 공정해 지기를 마냥 기다릴 여력이 없기 때문에, 불평등한 사회적 조건하에서 더 큰 정의를 위한 치열한 경합말고는 사회적 약자가 가지는 다른 대안이 없을 수 있다(Young 2000, 73; 2001, 685).

2. 민주적 소통과 시민의 성장과의 관계

그렇다면 소통적 민주주의가 상정하는 확장된 소통방식들이 시민의 성장을 어떻게 견인할 수 있는가? 민주적 소통과 시민의 성장은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

본 논문에서 필자는 ‘시민의 성장’이란 시민의 자아발전(self-development)의 상태로 정의한다. 영에게 자아발전은 사회정의의 중요한 일면이다. 영에 따르면, 자아발전이란 가치는 소통의 제도적인 조직화와 관련된다. 정의로운 사회제도는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가 인정하는 바탕에서

발전성 있는 기량을 익히고 활용하는 조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즐기고 소통하는 사회적 삶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시야를 표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Young 2000, 48). 정의로운 사회제도 속에서 민주적 소통에 대한 억압이 없이 본인의 시야(perspective)가 성립된 상태를 자아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영에 따르면 시야(perspective)란 성찰적 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사회구성원 각자가 경험하는 감정과 관점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한 사회적 지식은 다른 사회구성원의 위치에서는 보이지 않고 그러한 지식을 전제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구성원 각자는 자신의 사회적 맹점, 오해, 무지를 다른 구성원들 각자가 서있는 복수(複數)적 시각들에 비춰 성찰적으로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과 문제를 상호호망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시야가 트이는 것이다. 내 사회적 위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근시력(近視力)과 나와 다른 사회적 위치에 있는 다른 구성원이 나와 사회를 보는 시각까지 생각하게 하는 원시력(遠視力)을 아우르고 교차하는 심상(心象)이 바로 시야인 것이다. 이 점에서 영은 시야를 “무엇을 봐야 하는지 결정하지 않는 채 사회적 과정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으로 정의하기도 한다(Young, 2000, 222). 또한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오리도 토끼도 아닌 상태’로 설명한다. 내 위치와 경험 그리고 시각에서는 오리로 보이는 것이 다른 구성원들의 시각들에서는 토끼로 보일 수 있기에 이 둘을 성찰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서로를 배제하는 극성(polarity)의 토끼도 오리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느 한편의 것도 배제하지 않는 혼종(hybrid) 상태로 교차해서 볼 수 있는 전망이 바로 영의 시야이다(Young, 2000, 225).

따라서 시야는 통일된 혹은 하나의 시각과 시점이 아닌 다른 혹은 복수의 상대적 시점에서 볼 수 있는 성찰적 시각까지를 아우르는 인식상태이다. 이동의 자유를 외치며 각종 문턱을 낮추고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장애인들의 요구와 기대를 접하게 되면 비장애인들은 장애와 비장애의 차이가 있는 사회적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재구성해야 하는지 배우게 되며 세상을 보는 시야가 탈바꿈하게 된다. 영에게 시야는

다른 위치에 처한 구성원들의 시각들이 각자의 소통방식과 소통무대를 통해 억압 없이 원활히 소통됨을 전제할 때, 그 구성원들이 확장된 시력으로 탈바꿈하는 개개인의 발전이자 시민적 성장의 상태이다(Young, 2000. 226-227).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적 소통방식은 시민을 성장시킨다고 영은 보았다(Young 2000, 82, 185). 그것이 감정 섞인 몸짓이나 비언어적 소통 수단이더라도 시민에게 성찰의 계기를 줄 수 있으며, 전통적인 제도권 밖의 광장이나 거리를 무대로 하더라도 시민에게 사회적 지식을 넓혀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것이 쟁투적이며 경합적이더라도 시민 서로가 서로에게 배워가는 대여정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주적 소통방식은 인식론적으로 탈바꿈된 시야를 갖춘 시민으로 변혁시킨다. 그 결과 시민의 성장을 견인하는 과정 속에서 광장의 비언어적인 경합적 소통수단이 배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소통수단은 시민 각인이 자신의 자리에서 봐왔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비춰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다른 구성원들을 공적으로 조우하는 경험을 통해 각자의 울타리 넘어 확장된 사회적 지식을 쌓을 수 있으며, 기존의 자신의 사고의 틀을 넘어서는 확장된 사유를 가능케 하는 시야를 구성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Young 2000, 175-177).

따라서 영에 따르면, 부정의에 신음하는 약자의 비탄과 공포에 떠는 절규는 그것이 비록 정제(淨濟)되지 않은 불안한 감정의 하나일지라도 함께 구성하는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경종이자 다른 구성원들이 각자의 일상이란 관성에서 멈추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다. 광장과 거리 역시 시민의 성장을 견인하는 학습의 장이다. 광장과 거리에서 조우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개별 시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알고 있는 경험에 기반한 각자의 지식을 반성하고 교정하는 학습 자료를 시민에게 선사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소통적 방식들은 사회적으로 확장된 지식에 기반한 사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침묵하고 관망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옳음을 위해 기존의 규범과 경합하고 쟁투

하는 능동적인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준다. 확장된 소통수단은 더 많은 성찰적 계기를 부여하고 더 많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매시켜, 구성원들을 서로에게 가르치고 서로에게 배우는 더 객관적인 시야를 갖춘 시민으로 성장시킨다.

IV. 세월호 운동의 사례

이 장에서는 민주적 소통이 시민의 성장을 견인한 사례로 세월호 운동을 살펴보려 한다. 그러나 논의에 앞서 왜 이렇듯 비극적 사건을 주목하는지 밝혀둘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말하면, 비극과 슬픔은 기쁨과 영광보다 민주적 공중에 훨씬 가깝기 때문이다. 기쁨과 영광은 자기편의 승리와 영광만을 연호하고 상대의 처지에 대한 공감력과 상상력이 전무한 광팬(fandom)의 검투 관중석에 가까울 수 있다(Nussbaum 2003, 10-13).³⁾ 따라서 기쁨과 영광은 변함없기를 바라는 관성과 타성의 감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비극과 슬픔은 타성을 멈추고 달리보고 되돌아보게 되는, 김상봉(2015, 380-383, 남궁협 2018, 68에서 재인용)의 표현으로 하면, “관성의 나와 각성의 내가 분리되는” 자기분열적이고 성찰적인 감정에 가깝다. 이 점에서 비극과 슬픔이 익숙함보다 낯설음과 이질적인 차이를 무시하지 않고 소통하는 민주적 공중과 상통

3) 비슷한 맥락에서 김왕배(2017)는 태극기집회는 참여자들이 강함과 자긍심만을 강조함으로써 이견을 적으로 규정하는 팬덤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왕배에 따르면, 태극기집회의 참여자들은 사리사욕을 버리고 “보릿고개를 넘어 산업화를,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자유대한민국을 건설한” 자긍심으로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자유대한을 지키기 위해 다시 나온” 애국시민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김왕배 2017, 40). 또한 이들은 군복, 군장, 군가 등의 남성적 상징, 기호, 구호 속에서, 자신을 초월한 집단에 동화되어 함성을 지르고 기분을 발산하는 “스포츠관람석에서 느끼는 것 같은 집합흥분”인 “군중의 기쁨”을 느끼고, 소위 우익 보수세력의 세계관에서 벗어난 집단은 모두 ‘척결,’ ‘박살’내야 할 ‘종북좌파’라는 프레임으로 낙인찍고, 이견은 적으로 규정하는 경청과 성찰 없이 자기편만 연호하는 위험한 광팬(fandom)의 모습을 보인다고 강조한다(김왕배 2017, 37, 26-27).

하기 때문이다.

1. 왜 세월호 운동인가?

세월호 참사는 배의 침몰을 넘어 선장을 비롯한 개인들의 무책임, 해운사의 무차별적 이윤추구와 이를 방조한 국가의 규제완화, 구조과정에서의 국가의 총체적 무능력, 언론의 비판 능력 상실 등 한국 사회의 적나라한 민낯이 드러난 유례없는 참사였다(이재근 2015, 27). 또한 이는 ‘생중계’된 비극의 참상과 “이성적이고 논증적인 단어를 결합시킬 수 없고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겪는” 유족의 통곡을 보며 전 국민이 일상을 멈추었던 충격과 슬픔이었다(박명림 2015, 15).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됐지만 그날은 특별한 날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그 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을 떠올리면 각자 자신의 행적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중앙일보 19/12/22)⁴⁾ 모두의 뇌리에 박힌, 즉 “‘세월호’라는 말이 국민의 가슴과 머리에 아픔으로 남게 되는 사건”이었다(임의영 2017, 8).

이 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전체를 개괄하지 않는다. 대신 세월호 침몰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에 순응하던 제도권이 입장을 바꾸고 ‘잊지 않겠다’는 여론이 외면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진행된 세월호 운동에 주목한다. 이 시기는 진상규명 요구가 장기화되면서 희생자의 유가족 지정요구, 대학 특례입학 요구 등 허위와 왜곡의 혼란 속에서 유족들에게 ‘시체장사’라는 혐오와 ‘폭식투쟁’이라는 조롱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지방선거와 재보선의 승리를 계기로 제도권 반응이 돌변해 외려 경제침체의 원인을 유족들에게 돌리던 시기였다(박명림 2015, 14).⁵⁾ 그 시기

4)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22일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준비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핵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문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세월호 참상 당일을 설명하며 언급한 표현이다.

5) 강원택(2015)의 연구는 2026 재보선과 지방선거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보고한다.

에는 ‘유족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계기로 유족의 진정성에 폭력적 채색을 가하며 도덕적 매도가 기승을 부렸으며, 여론의 기류도 급변하여 ‘잊지 않겠다’는 노란리본이 힘을 잃기 시작한다(유해정 2018, 197). 세월호 진상규명 및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해온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존엄과 안전위원회’는 이 시기를 2014년 7월 1일자 칼럼에서 이렇게 술회한다.

대통령부터 나서서 ‘세월호를 잊고 경제부터 챙기자’고 이야기했다. 참사의 범인으로 지목된 유병언 부자를 잡기 위해 전국 곳곳에 전단지를 붙이고 반상회를 열었다. 철저한 국정조사를 약속한 국회는 가족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표류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축소 조사할 지에만 여념 없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분노조차 보텔 힘이 작아지고 있다.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국무총리는 유임되고 결국 ‘최종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눈물 흘리던 대통령은 세월호에서 이미 탈출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악의적인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 진실을 덮기 위한 권력은 거대하고 집요한 힘으로 참사를 덮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잊지 않겠다’는 많은 이들의 약속은 왜소해 지고 있다(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이 장은 제도권 정치는 외면하고 약자의 정치는 힘을 잃어가는 위와 같은 시기에, 약자가 겪는 슬픔과 통곡을 용기 있게 마주한 광장의 소통이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민주적 시민의 성장과 연결되는 지점에 주목한다.

또한 이 장에서 언급하는 세월호 운동이란 조직화된 결사체 운동이라기보다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들이 진상규명과 안전한 나라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실천의 집단적 움직임을 지칭한다.⁶⁾ 그렇기 때문에, 사회운동이나 시민사회 종사의 경험이 전무하고 특정 시민단체에도 속

6) 참여연대는 세월호 운동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해 국가와 사회에 변화를 촉구하는 시민들과 국민대책회의의 다양한 활동”이라 규정한다(이재근 2015). 하지만 이 글에서는 ‘조직화되지 않은’ 개개인, 특히 주로 ‘주부엄마’의 진상규명 촉구와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으로 좁혀서 정의한다.

한 적이 없는 주체들의 광장의 경험과 소통방식, 그리고 이들의 시민적 성장에 주목한다. 개별 시민의 경험과 성장이라는 정성적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수행해야 하지만, 본 연구는 세월호 운동에 3년 이상 참여한 이들을 심층 분석한 유해정(2018)의 연구와 세월호 운동 단체에서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들을 심층 인터뷰한 강태수·신진옥(2019)의 연구를 기반으로 심층 인터뷰 분석을 재구성하였음을 밝혀둔다.⁷⁾

2. 세월호 운동의 민주적 소통과 시민의 성장

1) 민주적 소통의 다양한 방식들

슬픔과 분노의 감정표명

참사의 중심에는 희생자와 유족의 슬픔이 있었다. 이들과의 소통에서 어떠한 이성적 논증이나 논리적 언변도 소통수단으로서 의미가 없었다. 특히 희생자 대부분이 무고한 아이들이었으며, 유족들 대부분이 자식 잃은 부모들의 슬픔이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자식이자 부모이고 평범한 부모에게 자식은 삶의 등대이자 희망이며 의미인 경우가 많다. 평범한 부모라면 자식의 죽음을 생각하거나 입에 올리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고 섬뜩함이다. 누구도 언어로 입에 담을 수 없고 떠올리기도 싫지만, 자식 잃은 자의 슬픔을 보며 평범한 감정의 부모는

7) 전체적으로 유해정(2018)의 연구는 본 논문과 마찬가지로 비극과 애도를 통한 시민의 성장이라는 측면을 강조한다. 유해정은 백상현의 '방향'이론에 기반하고 있으나, 본 논문은 아이리스 영의 민주주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음에서 차이가 있다. 유해정의 연구는 지속적으로 세월호 운동에 참여한 사회운동 무경험자인 평범한 '주부엄마들'이 자신의 위치인 평범하고 선량하고 순종적인 삶에서 어떻게 시민적 경험과 성장을 이뤄가는지를 분석했다. 강태수·신진옥(2019)의 연구는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공감과 혐오를 집약적으로 보여준 사람들의 전형적인 의식 구조를 해석적으로 재구성했다. 특히 유해정의 연구는 심층인터뷰 대상자들이 의도치 않게 기혼 엄마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필자의 연구의 분석 사례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밝힌다.

자기 자식의 손을 ‘묵언으로’ 꼭 쥐고 자식의 눈빛을 다시 보고 쓰다듬고 품에 안아 존재를 확인하는 소통을 하지 않았을 부모는 없었을 것이다. “부모들이 애 때문에 살잡아요. 애를 위해서 뭘 하고 그러는 건데, 소식 접하고 밤새도록 부모님들 심정만 아른아른 하는 거예요....아이들 죽은 것도 슬픈데 거기에다가 부모님들 감정까지 느끼지니까...한 두 명도 아니고 수백명이니까...억울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유해정 2018, 192 사례H). 부모라면 하나 같이 그들의 처지에 자신을 대입하고 그들의 처지에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다. 삼백 사명이 죽은 사고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죽었다고 슬퍼하고 있는 그것들이 삼백 네 장면이 이렇게 타타타타 그렇게 떠올리며”(강태수·신진욱 2019, 208 사례A6), 때로는 “아이들을 이제 어린이 집에 보내고 마음껏 웃고 안아주고 나서 집에 왔을 때 그분들이 생각나면서...지금 나는 이려고 있는데 아이가 없는 그분들의 마음 그 사이에서 많은 힘든 감정을 경험하며”(강태수·신진욱 2019, 210 사례A3) 유가족의 상심에 이입했다.

광장의 조우 그리고 성찰의 계기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법원에서 ‘공적 예의’가 된 논리적이고 문어적인 어법이나 점잖은 태도는 슬픔의 소통에 방해가 될 뿐이었다. 사회운동의 무경험자였으며 조직화되거나 사업화된 시민단체에 속하는 것도 거부감이 있었던 그리고 여성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일을 숙명으로 생각했던 대개의 ‘엄마들’은 유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방관자로 머물지는 않았다. 누구는 가만있으면 병날 것 같은 심정에 “사건을 보고 매일 울면서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울화가 치민다고 해야 하나. 우리 딸이 딸도 같이 옆에서 울다가 엄마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제가 그때 광장에 안나”갈 수 없었다(강태수·신진욱 2019, 208 사례A1). 광장에서의 조우는 이들을 방관자에 머물지 않게 했다.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유가족들의 단식농성을 한번 보러 갔다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힘 같은 게 생기고...가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출발의 계기가 되었다(유해정 2018, 200 사

례I). 공중 앞에 나서본 경험이 없고 뭘 해야 할지 몰랐던 엄마들도 자신보다 애가 많지만 “1인 시위를 하는 00씨가 3시간 썩 1인 시위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고 한 달 넘게 고민하다 피켓을 들고 나왔다(유해정 2018, 201 사례J). 뿐만 아니라, 서로의 용기를 자극해 공중에게 자신을 드러내 세상과 소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광장에서의 조우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세상을 달리보는 계기가 되었다. 고된 노동을 하며 고립된 개인으로 극도의 부정적 사회경험을 쌓았던 그래서 감히 자신의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던 수옥(A5)(강태수·신진옥 2019, 212)은 세월호 참사가 매개가 되어 다른 사회적 사건에서 대해 연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광장에서는 누구나 존중 받는, 그리고 그 집회 현장에서는 누구나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알려”주고 있었음을 느끼며 세상의 께적을 넓혀 갔다.

경합적 대담형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는 진상규명에 소극적이었던 제도권과의 경합이었다. 이러한 경합과 투쟁은 제도권의 문법처럼 질서정연하거나 평화롭거나 차분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영의 지적처럼 사회의 부정의를 호소하는 수단들은 쟁투적이며 경합적이다. 이러한 경합은 때로는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농성과 행진으로 표출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이는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리는 귀중한 수단이 된다. “제가 평화로우면 다 평화로운 건 줄 알았는데...나랑 내 주변 사람들만 행복하면 행복한 삶이다 했는데...세월호 뿐만 아니라 여기서 농성하면서 계속 만난 투쟁하고 있는 농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의 세상은 이런 세상”과 소통을 할 수 있었다(강태수·신진옥 2019, 213 사례A6). 때로는 제도권과의 혹은 다른 구성원과의 경합은 참여자들의 내적 경합에서 격렬함을 감수하게 한다. 누구는 1주기 광화문 점거시, 경찰들이 엄마들의 화장실 출입조차 통제해 길거리에서 용변보는 걸 보면서 “아 그때는 살인 충동을 느꼈어요. 이거는 인간이기를 거부하는구나. 이걸 국가가 아니구나”라는 살인 충동을 감수해야 했다(유해

정 2018, 208 사례*). 나아가 소란과 시끄러움의 의미를 재음미하게 된다. “광화문에 나와 보니 세상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고, 시끄러운 지 몰랐어요. 근데 그 시끄러움이 우리 모두를 더 낮게 한다”는 생각에 그치지 않고, 동시대의 경합적 문제 상황들까지 생각이 미치게 된다(유해정 2018, 212 사례H). “피켓팅과 행진을 하면서 고공농성하는 사람들을 봤고...내가 겪고 있는 것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으며...나 자신도 소수자라는 생각까지”다다르게 되었다(강태수·신진욱 2019, 215 사례A3). 어느 누구는 한가한 나들이객 뒤로 보이는 강경진압에 투쟁적인 유가족을 보며, 5·18광주의 현재적 쟁투를 보고 있었다. “4·3, 5·18에서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다 하나더라고요...부모님들도 내 아이가 왜 죽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싶겠지만,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왜 그랬는지 밝히는게 역사적 소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유해정 2018, 211 사례A). 경합의 역사적 대장정 속에서 자신들의 임무를 광주와 소통하며 찾아나서고 있었다.

2) 쟁투적 대장정과 시민의 성장

서로를 보며 깨치고 성찰하고 배워가는 교학상장의 대담구를 통해 참여자들의 시민적 키가 한 층 커지게 되었다. 비극적 참사를 계기로 광장에서 지속적인 소통은 인생관을 재정립하는 시민적 성장으로 이어지고 삶의 지향점도 바뀌게 되었다. “세월호 때문에 시간, 공간, 인간관계...가는 곳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낼지가 완전히 바뀌었”지만, “바뀐 삶이 더 좋고 의미있게”(유해정 2018, 214 사례I) “좋은 것을 향해 우리가 좀 더 연결되어 있다”(강태수·신진욱 2019, 213 사례A)고 생각하고 있었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삶이 바뀌었어요...내가 무엇이 되느냐보단 어떻게 사느냐로 바뀐 것 같아요...아픈 사람들, 고통 받는 사람들 옆에 있어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유해정 2018, 214 사례G)과 “누군가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강태수·신진욱 2019, 213 사례A)는 확신이 생겼다. 자신의 삶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 있는 삶, 각자의 행동과 실천의 목적을 구성하는 가치에 대한 지향점이 달라진 것이

다. 이런 측면에서 단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선택지들을 선택할 것이냐 말것이냐의 관객적(audience) 삶의 시각에서 새로운 선택지들을 제작해갈 수 있는 원작자적인(author) 삶의 장본인으로 탈바꿈해가고 있었다. 영의 표현으로는, 정치적 사회적 삶의 연계지점들을 체화하고 실천해가는 앙가주망(engagement)을 깨닫는 시민적 주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Young 2020, 47-49). “난 예전부터 수동적이고, 특별한 삶의 목표가 없었어요. 내 인생은 가족에 순응하다 죽겠지 했는데 목표가 생겼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안 휘둘리고 살려고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싶어서 많이 들여다보고 살”(유해정 2018, 214 사례 E)게 되었고, “잘 길들여진 순응하는 여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피켓을 드는게 두려웠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고...세상에 부끄럽지 않고 역사가 진화하는 과정에 한발자국 같이 한다는 거”(유해정 2018, 214 사례 H)에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 “요즘은 페미니즘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성들은 정말 많은 억압을 당했구나 싶고, 나도 딸로, 아내로, 엄마로 갇혀있구나 싶고, 저는 세월호로 정말 너무 많이 큰 것 같아요”(유해정 2018, 214 사례 J).

세월호 운동은 그 중심에 유가족의 슬픔이 있으며, 사회 각 부문의 조직화된 운동이지만, 이 글에서 주목하는 세월호 운동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슬픔으로 드러나는 부정의에 대응한 ‘조직화되지 않은 사람들(주로 주부엄마)’의 시민사회운동이다. 비극적 사건을 통한 사회운동은 민주주의가 단지 선거나 의회의 이성적이고 성인군자 같고 이성적인 젠틀한 토론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때로는 광장과 거리의 슬픔과 절규 그리고 걱정의 몸부림을 그 소통 수단으로 결합하는 소통의 대장점임을 보여준다. 이 같은 광장의 대장정 속에서 사회구성원 역시 자신의 위치지어진 시각에서 벗어나 타인의 시각에서도 자신을 볼 수 있는 성찰적 시야를 학습하게 되며, 타인의 고통을 방관하는 관객에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수호자로서의 시민으로 거듭난다. 이 같은 소통적 민주주의는 선거적이고 이성적인 민주주의가 배제·간과하는 민주적 소통의 요소가 그 구성원의 성장과 그 정치체제

의 변화를 가져오는 저변이 넓고 두터운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는지 보여준다.

IV. 결론

이 논문은 민주주의와 시민의 성장 간의 관계를 아이리스 영의 소통적 민주주의를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세월호 운동에 가담한 참여자의 경험을 통해 소통적 민주주의가 시민적 성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앞서 강조하였듯이, 사회적 약자가 의사결정과 소통 과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규범성을 강조하는 영의 소통적 민주주의는 감정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민주적 소통수단으로 인정한다. 또한 제도권의 정형화된 공간뿐만 아니라 광장 같은 무대를 공적 소통의 장으로 포괄한다. 이 같은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적 약자는 자신의 성찰하는 계기를 갖고, 사회적 지식을 확장함으로써 성찰적 시야를 확보하게 된다. 소통적 민주주의의 이러한 특징으로 볼 때, 세월호 운동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선거민주주의 혹은 기존 심의민주주의에서 등한시해 온 소통수단을 매개로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 강원택(편). 2015. 『2014년 지방선거 분석』. 서울: 나눔.
- 강태수·신진옥. 2019. “세월호 ‘노란 리본’과 일베의 ‘폭식 투쟁’: 공감과 혐오의 전형성과 그 비전형적 생활세계.” 『문화와 사회』 제27권 3호, 183-238.
- 김상봉. 2015. 『만남의 철학: 김상봉과 고명섭의 철학 대담』. 서울: 길.
- 김왕배. 2017. “언어, 감정, 집합행동: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제25권, 7-59.
- 김주형. 2018. “숙의와 민주주의: 토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공론화위원회.” 『현대정치연구』 제11권 3호, 69-104.
- 김희강. 2010. “공공성, 사회집단, 그리고 심의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보』 44권 2호: 5-27.
- 남궁협. 2018. “타자의 고통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언론의 역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91호, 41-75.
- 박명림. 2015. “세월호 정치의 표층과 심부: 인간, 사회, 제도.” 『역사비평』 2월, 8-31.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14/07/01. “인간 존엄의 깃발을 다시 세워 참사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http://sewolho416.org/754> (최종검색일: 2021/03/03).
- 심성은. 2015. “유럽시민발의와 유럽연합 참여민주주의.” 『통합유럽연구』 제6권 2호, 61-88.
- 오현철. 2010. “토의민주주의와 시민의회.” 『시민사회와 NGO』 제8권 2호, 41-70.
- 유해정. 2018. “정치적 애도를 통한 삶의 재건: 세월호 참사의 시민 경험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8권 2호, 181-200.
- 이관후. 2018. “Deliberative Democracy의 한국적 수용과 시민사회: 숙의, 심의, 토의라는 번역어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제11권 1호, 189-219.

- 이재근. 2015. “가만히 있지 말고, 함께 세월호 운동을: 다시 돌아보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시민과 세계』 26호, 152-178.
- 임의영. 2017. “세월호, 촛불, 그리고 공공성.” 『월간 공공정책』 제138호, 8-9.
- 장동진. 2012. 『심의민주주의: 공적 이성과 공동선』 서울: 박영사.
- 정병순. 2020. “시민민주주의의 조건, 속의 민주주의의 제도화.” 『정책리포트』 제311호, 1-25.
- 정정화. 2018.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형성의 성공조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2권, 1호 101-24.
- 조희정. 2018. “시민참여제와 민주주의: 합의회의와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과 세계』 6월, 67-99.
- 중앙일보. 16/12/22. “헌재, 박 대통령에 ‘세월호 7시간 행적 밝히라.’” <https://news.joins.com/article/21033057>(최종검색일: 2021/03/02).
- 채진원. 2019. “속의민주주의 지향의 선거법규제의 전환.” 『한국과 국제정치』 35권 3호, 123-155.
- 최경희·하세헌. 2015. “타운홀 미팅과 심의 민주주의.” 『한국행정논집』 제27권 4호, 1215-1242.
- 현남숙. 2020. “다문화시대의 공론장과 의사소통: 셀라 벤하비브의 심의 민주주의와 아이리스 영의 소통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철학·사상·문화』 제32호, 122-138.
- 홍성구. 2019. “속의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자유주의의 급진화와 정치 참여 확대.” 『한국언론정보학보』 96호, 140-164.

Fishkin, James S. 2009. *When the People Speak: Deliberative Democracy and Public Consult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Thompson, Dennis F. 2008. “Deliberative Democratic Theory and Empirical Political Scienc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No. 11, 497-520.

Lafont, Cristina. 2017. “Can Democracy be Deliberative and Participatory? The Democratic Case for Political Uses of

- Mini-Publics.” *Daedalus* Vol. 146, No. 3, 85-105.
- Nussbaum, Martha C. 2003. “Compassion & Terror.” *Daedalus* Vol. 132, No. 1, 10-26.
- Young, Iris Marion. 1990. 김도균·조국 역. 『차이의 정치와 정의』. 서울: 모티브북.
- 1996. “Communication and the Other: Beyond Deliberative Democracy.” Seyla Benhabib ed. *Democracy and Difference: Contesting the Boundaries of the Politica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2000. 김희강·나상원 역. 『포용과 민주주의』. 서울: 박영사.
- 2001. “Activist Challenges to Deliberative Democracy.” *Political Theory* Vol. 29, No. 5, 670-90.

투고일 : 2021년 3월 15일 . 심사일 : 2021년 3월 22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3월 29일

* 나상원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수료를 하였으며, 『포용과 민주주의』, 『돌봄: 사랑의 노동』, 『돌봄민주주의』 등 공역서가 있다.

<Abstract>

Democratic Communication and Citizen's Self-development :
Focusing on the Theory of Communicative Democracy

Sangwon Na
(Korea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Citizen's self-development. In particular, it focuses on Iris Young's communicative democracy. According to Young, communicative democracy is a democracy in which the perspectives of the socially marginalized citizens are not excluded in the process of public decision-making and communication. It purposes to show how democratic communication affects the self-development of socially marginalized citizens in light of communicative democracy, and as an example, how democratic communication leads the self-development of participants in the Sewol ferry movement. For this purpose, the paper aims to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more just and substantive democracy theory by enabling an expanded understanding of democratic subjects and their communication methods. In the end, while existing democracy focuses on periodic elections and limited to understanding the way political communication and decision-making. Ultimately, while existing democracy only understands the political communication and decision-making method centered on periodic elections, this paper intends to contribute to expanding the meaning of democratic communication and citizen's self-development through communicative democracy.

Keywords : communicative democracy, citizen's self-development,
democratic communication, Iris Young, Sewol ferry movement